

투데이 칼럼

청렴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

우리는 자주 청렴한 나라, 청렴한 사회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감하곤 한다. 그만큼 현재 체감하기에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청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탐욕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99개를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욕을 나타내곤 하며 이런 행위가 너무 지나쳐 사회가 용인하는 합리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갑질 논란, 공직자 비리 등도 따지고



정준호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면 그 바탕에 지나친 탐욕이 깔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친 탐욕은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사건을 일으켜서 이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병합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사회지도층과 공직자의 경우 더욱 청렴을 유지해야 하지만, 매년 터져 나오는 지도층과 공직자의 부패사건은 대형 사건사고의 한 원인이 되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실망감을 안김으로써 지

금 '헬조선'이라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게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민약 청렴한 사회였다면 이런 우리사회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 국제지표에서도 청렴한 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다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각종 정책을 꾸준히 펼

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사회에 청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 이에 공감하고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공직자에게 편의를 보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해야 하며 부패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청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도 직원들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청렴서약, 청렴캠페인, 청렴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서부보훈지청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사설

전북도는 지역 경제 현실 고민해야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지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해야겠다. 지역 경제가 이래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면 연일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지방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또 다시 엄청난 소식이 들리고 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물량을 이관 검토 중이라니 말이다. 어쩌자고 이렇게 어두운 소식만 잇따라 들리는 것인지 답답한 나날이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물량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게 되면 문제가 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6천여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 것도 힘든데 전주 쪽에서 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상가상이다. 그렇게 되면 전북 경제가 먼 옛날로 돌아가 회청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 전북도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북 경제가 동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지역 기업들의 현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래라저이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기업들이 잘돼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터인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대

량 해직 사태로 실업자들이 양산될 판이니 말이다.현재 지역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국책사업이 새만금 말고는 달리 없는데 새만금 내부 개발을 보면 지난 수년간 거북이 걸음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고 시작한 탄소사업도 그렇다. 지원이 너무 미미해 백년 먹거리라는 거창한 수사와는 달리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거나 전북도의 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지역 경제가 비상에 들었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에 몸 담고 있는 이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말했었는데 그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더 다져야겠다.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는 이유가 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난국 돌파가 어렵다. 현재 그 정도의 정신자세로는 도민들의 위기 의식을 풀어주지 못한다.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계속 켜지고 있는 이때, 전북도의 경제 브레인들은 도민 앞에서 고민해야 한다.

독자제언

무료 효도관광 뗏다방(불량식품) 경제주의보

우리 옛말에 잔계 비자떡이라는 속담이 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여행 일명 뗏다방 사기업체들이 들끓고 있다.

연예인을 초청하거나 어르신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공연을 하고 화장지·세제 등을 공짜로 나눠주며 저가의 식품을 허위, 과장광고 또는 현혹성 멘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주머니와 건강을 위협한다.

실제 무료 효도관광 등을 빙자해 여행자가 아닌 홍보관에 모셔가면서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것처럼 불량식품을 속여 판매하기도 하고 시중에 1만 5,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가시오가피 제품을 6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뗏다방에서 물건을 사신 어르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하면

서 자식보다 살갑게 대해는데, 속셈을 알면서도 속여주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의 무료함과 외로움, 정보부족 등을 이용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관광, 사은품제공)는 일단 의심해 보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구매 시에도 판매자의 전화변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구매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도 가능하다.

불량식품 관련하여 제보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주변에 이러한 뗏다방(불량식품) 판매업이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33로 신고하도록 하자.

정지선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절실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어 자전거 이용객들을 도로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가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운동, 레저 목적으로 많이 타고 건강할 삶을 위해 혹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차마에 해당하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전거는 음주, 무면허, 과속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과 처벌을 받는다.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시에는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으며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거나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면 보행자로 본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자전거는 책임보험이 종합보험가입대상 아니므로 개인합의를 하여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차량운전자 보험 미가입이거나 보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반대로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자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다닐 경우 현행법상 차로 보고 있어 자전거를 운행할 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오른쪽 바깥차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데 자전거 이용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은 교통신호 준수와 안전장구 착용이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의 70% 이상이 머리부상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습관과 외상방지를 위해 보호대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하다.

양예리 남원경찰서 중임지구대 순경

전북 발전 사업 추진에 속도

도내 신규 사업 추진에 힘내야겠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왜 이런 언급을 하느냐면 정부가 건축 재정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건축 재정 굳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SOC 분야가 그렇고, 산업 분야가 그렇고, 뚝방에도 농업 분야가 그렇다. 한결같이 우리 전북 지역의 미래를 말하는 것들인데 열려가 된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뒤처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의 고위직에 있는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 부처가 건축 재정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가 건축 재정을 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이쪽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보여주는 그 이상으로 끈덕지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약속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과 탄소산업이 먼저 떠오르는 중에 그마저도 일의 추진을 보면 거북이 걸음이니 답답하다.그래도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SOC 확충에 힘내야 하고 산업 분야 활성화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저번에 공표했던 탄소산업 구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워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